

연금연구회 제13차 세미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안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연금연구회 13차 세미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안"

좌장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주제 발표

발표 1 : 박준영 청년 (경희대 산업경영공학 전공)

- 가만히 있으라! -

발표 2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개혁방안 -

토론자

김대영 세무사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청년세대 대변)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민동환 청년

(서강대 경제과 대학원생,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양정아 청년 (미술 작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

<https://www.pensionfutureforum.org/>

(2026년 2월 25일 자료집 최종 작성 시점인
오전 10시 40분 구글 검색. AI 모드)


AI 모드 전체 뉴스 이미지 쇼핑 더보기 ▾

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연구하는 **재능 기부 형식의 사회봉사 단체**입니다. 

주요 특징과 최근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정체성 및 가치

- **재정 안정 중심:**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보며, '더 받는' 개혁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구합니다.
- **세대 간 형평성:** 청년과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 **구성:**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리더로 하여 연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YouTube +3

2. 주요 주장 및 활동

- **자동조정장치 도입:**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을 살릴 필수적인 도구로 강조합니다.
- **국민연금 기금 보호:** 최근 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 **연금 개혁안 비판:** 세대 간 불공평을 심화시키는 일부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 약탈'이라며 비판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 [▶ Daum +5](#)

더 자세한 정보나 연구 보고서는 [연금연구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연구회 13차 세미나

주제 발표 (별첨 자료 1 & 2)

발표 1 : 박준영 청년 (경희대 산업경영공학 전공)

- 가만히 있으라! -

발표 2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개혁방안 -

토론

토론 1

김대영 세무사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청년세대 대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 독립성과 책임의 균형

1. 권한에 걸맞은 '책임의 시대'로

세무사로 수많은 자산 관리와 신탁 업무를 경험하며 느낀 점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외부의 간섭이 발생하고 관리자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반드시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5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기금의 현재 지배구조가 수탁자로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현행 지배구조의 근본적 결함

(1) 정치적 도구화와 시민의식의 간극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몇몇 해외 연기금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운용될 수 있는 것은 높은 정치적 성숙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금은 여전히 정권의 성과 홍보나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이 큼니다.

(2) 전문성이 결여된 아마추어리즘

이해관계 대변인 중심의 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세무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기업의 재무제표 결정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자산 배분과 고도의 대체 투자를 결정해야 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비전

문가들의 성토장'이 되어 정작 핵심적인 수익률 전략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3.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

(1) 신상필벌의 제도화

세무사가 오판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징계와 배상 책임을 지듯, 기금 운용에도 그에 합당한 보상과 책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연줄이 아닌 수익률로 평가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시장 수준의 보상 제공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만으로 인해 손실을 초래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2) 견제와 균형

소수의 전문가가 기금을 좌지우지할 때 발생하는 '엘리트 카르텔'의 위험은 운용 인력 규모를 글로벌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집단 지성의 상호 견제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특정 세력의 독단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3) '무늬만 독립' 방지와 투명성 제고

현재의 지배구조 상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더라도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통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큼니다. 따라서 막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되,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강력한 사후 책임을 묻는 체계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치적 결탁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용 방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4.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세무 대리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납세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 역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맡은 수탁자로서 그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기금 운용에서 정치를 걷어내고 전문성을 세우는 것, 그리고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약속일 것입니다.

토론 2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

1. 서론: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NPS)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판단 의무(Duty of prudence), 정치적·외부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Political Independence)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거버넌스 구조는 투자 전문성 기반 의사결정(Only Investment)을 저해하는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

2. 현행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의 문제점

현행의 국민연금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정치적 매개 중심 의사결정 구조: 현행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 차관 및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비상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이로 인해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투자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

전문성이 결여된 나눠먹기 식 위원 선발 시스템: 위원 구성이 정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중심의 정치적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글로벌 투자 경험을 갖춘 CIO급 투자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현저히 낮음.

투자위원회 및 CIO의 독립성 부족: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탓에 수탁자 책임 구조가 약함.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은 단순한 집행 책임자(Executive)의 법적 지위만 가질 뿐, 최고 투자 의사결정권자가 아님..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전략적 자산배분(SAA) 등 핵심 의사결정에서 CIO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임.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의 제한: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형태와 위치 역시 기금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준정부기관의 내부 부서로 편재되어 있어, 보상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공공기관의 경직된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잦은 퇴사와 인력 유출로 조직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

3. 선진 연기금의 거버넌스 혁신 사례

성공적인 연금 운용을 보여주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공통적으로 투자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명시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캐나다 CPPIB 모델과 일본 GPIF 모델이 강력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캐나다 CPPIB (전문성 중심 모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기금으로 평가받는 CPPIB는 독립 추천위원회(Independent Nominating Committee) 제도를 운영하고, 철저히 금융, 투자, 리스크 관리 전문가 중심의 독립이사로만 구성되며, 정부는 임의 임명이 아닌 추천위원회가 선발한 후보군에 대해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함.

의사결정 구조가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CIO의 자율성이 매우 높음.

일본 GPIF (준-전문성 모델): 금융 및 자산운용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는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단순한 감독 역할만 수행함.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전술적 자산배분(TAA) 및 개별 투자 실행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

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델 시사점 및 적용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비전문성과 정치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

위) 구조를 참조할 수 있음. 금통위 모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거버넌스 방향성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

대안 모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형태의 상설 독립 기구화 전환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근 전문위원 제도의 성과를 확장하여, 위원회 전체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형태로 전환하는 대안이 요구됨. 금통위는 7인의 최고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국가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상설 합의제 의결기관임.

다원화된 추천과 고도의 자격 요건: 금통위는 7인의 최고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국가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상설 합의제 의결기관임. 금통위원은 각계 기관(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거시경제, 금융, 통화 분야의 입증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후보군이 엄격히 제한됨. 이는 기금운용위원이 대표성 중심이 아닌,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기준으로 선발되어야 함을 시사함.

임기 보장 및 합의제 독립 기구: 금통위원은 임기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며,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의 직접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금리 인상 등 핵심 결정을 내림.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도 보건복지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문 수탁자 책임모델(Professional Trust Model)로 작동하는 완전 독립적 이사회를 구축해야 함.

5. 국민연금 거버넌스 핵심 개혁 방안 (Action Plans)

선진 연기금의 사례와 금통위의 독립성 모델을 융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을 제안

기금운용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첫째, 독립된 상설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또는 완전한 독립성을 지닌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탁월한 식견을 갖춘 민간 최고 전문가를 전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함.

둘째, 독립 추천위원회(Independent Nomination Committee) 신설: 가입자 단체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위원 전원을 자산운용,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철저한 전문성을 담보해야 함.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장치가 필요함. 정부는 후보 선정 권한을 내려놓고 철저히 감독권만 행사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함.

토론 3

민동환 청년 (서강대 경제과 대학원생.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국민연금은 납부액 대비 과도한 급여 지급 구조로 인해 매년 약 32조 원, 하루 평균 885억 원 규모의 미적립 부채를 발생시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연금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에 목소리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혁 과정은 보험료와 급여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기득권 민노총의 입장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만 연금을 많이 받으면 된다는 파렴치한 민노총의 이기심에 힘이 없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정부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국민연금을 원화 환율을 잡는 것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2030년 즉,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비공개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민노총은 받는 돈 43%는 너무 적다며, 50%까지 인상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청년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민노총을 보면서 많은 청년이 “민노총은 인간임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캐나다나 일본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치해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정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투자 방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부 임기인 30년까지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비공개 처리와 같은 불투명한 운영 관행은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국민연금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국회에서는 속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을 청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 ‘CIO 권한 강화로 전문적 투자 의사결정 체계 확립’ 등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그것이 정치권이 우선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국민의 노후를 위해 기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토론 4

양정아 청년 (미술 작가)

국민연금의 미래는 안전한가?

◆ 국민연금 토론회 발언문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앞으로 30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례적으로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이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으로 수익을 낸 젊은 세대가 다시 자산을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초대형 고래’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파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채권 비중을 낮추고 주식 등 수익형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유 역시 수익률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특정 정권의 경제 성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오가는 상황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팔고 주식은 사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융 투자로 수익을 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전,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한 분이 웃으며 자신의 계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래서 이 정권을 싫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산 중소형 주식은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단순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오를 주식으로 빨리 갈아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을 떠올려보면,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과연 안전한지 의문이 듭니다. 과열된 시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 테마로 급등했던 금양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반영되었고,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이슈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급등했던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추격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금양은 발표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과열되면 실적과의 괴리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괴리가 조정되는 순간, 충격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거품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치명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적 펀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담보로 운영되는 공적 기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2057년경이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두 배 가까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금은 결국 수익을 실현해 현금화해야 하며, 수급자가 증가할수록 그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장기적이지만, 연금 지급은 매달 이루어집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는 투자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분위기가 단기적 시장 열기에 휩쓸리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원칙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높은 수익률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국민연금이 단기 수익률의 환호 속에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에 보내온 내용을 다시 읽어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전자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국민 1연금 만들기 안내문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재테크는 평생동안 고정적인 월 생활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하는 노후생활! 국민연금 노후준비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문의 1355

이 안내문처럼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 5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오늘 박준영 청년과 김학주 교수님 발제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금연구회 12차 세미나 토론자로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왜?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탱자가 아닌 원래의 굴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박준영 청년의 발표 내용을 읽어보면 기성세대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분노감이 어느 정도에 달하는 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해 보이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던 세대들은 자신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학주 교수님 발제문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독립성 보장이 핵심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적 토양 속에서 국민연금 CIO에게 모든 전권을 부여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까요?

저는 크게 우려가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 기금운용본부장 그 자리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 위주로 임명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민연금 CIO에게 전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특정 정권에게 국민연금 운영 전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기금운영 전문가 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특정 정권 성향에 맞는 전문가들 위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 정 반대 성향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2015년(한양대 김성민 교수)과 2018년(양춘승 상임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천한 전문가 성향이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로 2015년 이투데이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m.etoday.co.kr/news/view/1150776#_enliple)

기금운영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맞습니다만,

현재의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하다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많을 거 같습니다.

소수의 대리인들에게 전권을 맡길 경우

오히려 더 쉽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